

16일 Market Index			
↑ 코스피	2399.86	↑ 코스닥	716.89
	(+13.77)		(+5.07)
↑ 금리 (연·9%)	3.454	↓ 환율 (원·달러)	1235.30
	(+0.085)		(-6.00)

‘월급 올라도 지갑은 텅~’ 고물가에 실질 최저임금 하락

최저임금 2년간 6.6% 올랐지만 7%대 고물가에 체감임금 하락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102.2% 한 가구당 부채 1억2374만원
금리인상 여파 22만원씩 더 늘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7% 이상 올랐지만 물가가 더 오르면서 실질 최저임금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를 잡기위해 금리인상이 지속될 경우 소비까지 감소해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성장 둔화, 부채 리스크, 고물가 지속 등이 경제를 억누르는 3고(苦)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9월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106.6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질 최저임금은 같은 기간 98.2로 하락했다.

◆치솟은 물가에 실질 최저임금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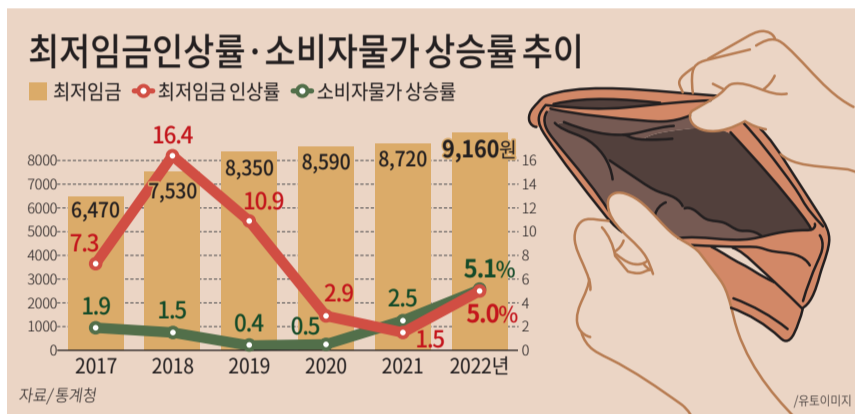
실질 최저임금이 낮아진 이유는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1.5% 올랐다. 지난해에는 9160원으로 5.05% 상승해 2년간 6.6%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7%가량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년간 물가가 7% 넘게 오르면서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것이다.

상당수 국가들도 지난 2년간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



1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소비자가 장을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3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전망치를 64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1분기, 73)와 코로나19 여파(2020년 2분기, 66)보다 낮은 수준이다. /뉴시스



했다. 지난해 9월 실질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미국은 87.7로 10% 넘게 떨어졌다.

포르투갈(99.7), 일본(99.3) 영국(97.4), 독일(97.3), 그리스(95.6), 캐나다(94.9), 스페인(93.8), 폴란드(93.5), 아일랜드(92.6), 네덜란드(88.8) 등 OECD 30개 회원국 중 21개국의 실질 최저임금이 하락했다.

◆ 물가잡으려 금리인상, 소비여력 감소

다만 물가를 잡기위해 금리인상을 지속할 경우 금융비용이 증가해 소비여력이 감소할 전망이다.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세계 부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2.2%로 세계 35개 나라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을 넘어 가계 빚 규모가 경제 규모보다 큰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는 1

년간 경제 모든 주체가 생산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부가가치로도 현재의 가계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3분기 말 우리나라의 가계 신용(가계부채) 총액은 1871조원으로,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1008조원(54%),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749조원(40%), 판매신용은 114조원(6%)이다. 지난해 12월말 가구수는 2370만세대로 부채를 보유한 가구비율(63.8%)을 적용하면 한 가구당 가계 부채는 1억2374만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전체이자 3조 3000억원, 한 가구당 가계부채는 21만8000원 증가한다.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최저임금이 낮아진 데다 금융비용까지 늘면서 소비여력 또한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6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대기업 공시부담 '완화' 내부거래 기준액 100억으로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현재의 2배로 상향하는 등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공정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시 기준금액은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도입한 2000년에는 100억원이었지만 2012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연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준금액을 50억원으로 내렸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간 기업들의 거래금액 규모가 커진 점 등을 감안해 100억원으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특히 5% 기준이 일률 적용돼 자본금, 자본총계가 적은 소규모 회사와 공익법인 등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소액거래까지 이사회 의결·공시의무가 발생했다. 이에 자본금 5%를 초과하는 내부거래도 5억원 미만 소규모라면 공시 대상으로 제외한다.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

공시 기준금액 현재의 2배로 늘려
자본 5% 초과, 5억 미만거래 제외
내부거래 25% 공시의무 해제 예상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시 기준금액을 100억원으로 올리고 5억원 미만 소규모 거래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2021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 2만건 중 25% 정도인 5000건 정도는 공시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주기도 완화한다. 현행 12개 분기공시 항목 가운데 주식소유, 자금거래 현황 등 공시 활용도가 낮거나 다른 공시로 보완이 가능한 8개 항목은 연 1회 공시로 전환하고, 공시기준일도 이에 맞춰 변경한다. 그간 일부 분기공시항목은 실제 거래빈도가 낮아 분기마다 이 항목을 '해당없음'으로 계속 기재해야 하는 불필요한 공시 부담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항목을 한 곳에 배치하고, 물류·IT서비스 거래현황을 공시할 때 비계열사로부터 매입한 물류·IT 서비스 거래금액은 현실적으로 구분·산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공시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제2 중동붐’ 청신호…尹, 韓기업 UAE 수출길 물꼬

尹 대통령, 비즈니스포럼 참석 100여개 기업 경제사절단 동행 에너지 등 총 24건 MOU·계약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3일 차인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외교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에는 100여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윤 대통령이 모든 정상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초점을 둔 만큼, 이번 비즈니스포럼을 계기로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과 동행한 경제사절단의 약 70%는 중소·중견기업으로 방위산업, ICT, 게임콘텐츠, 관광 등 유망 협력 분야 기업들이 다양하게 참여해 UAE와의 수출계약 등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UAE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을 구체화하고, 포럼에 참석한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현

대자동차 등 320여명의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한-UAE 비즈니스포럼을 통해 최소 61억달러(약 7조5000억원) 규모, 분야별로는 ▲에너지(6건) ▲신산업(8건) ▲방산(3건) ▲스마트팜(3건) ▲기업지원(4건) 등 총 24건의 MOU 및 계약이 체결됐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한-UAE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경제 분야를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성과였다"며 "정상외교를 통해 UAE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를 성공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경제중심의 정상외교가 실질적 성과를 창

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경제'에 초점을 맞춘 정상외교가 이번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실제 성과를 창출하면서 향후 윤 대통령의 '경제외교' 추진 행보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한-UAE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면서 300억달러(약 37조26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는 UAE 역사상 최대 규모로, 대통령실이 예측한 수준보다 상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김성태 "내가 이재명을 왜 만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변수
▲ 이광재 "국회 입법역량·예결산심사 기능 강화… 정치개혁 지원" /사진 뉴시스

▲ 국힘, 文대통령 책방 소식에 "한물 간 정치인의 작태 보여줘"
▲ 친윤 "관계개선 안되면 나경원 위험"… 비윤 "친윤 나경원 집단 린치"



▲ 이재명 "지방자치 '민주주의 초등학교'… 분권·자치 실현의 장" /사진 뉴시스
▲ 與·野 "정치개혁 의원모임" 첫발… "초당적 협력 선거제 개혁"